

02 산업 · 특허 · 관세

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

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(☎ 044-203-4613)

■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,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~6개월 단축됩니다.

- 2015년 7월부터는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(SPC)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%에서 70%로 완화되어, 30%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* 현행 자격요건자 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(투자적정등급,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% 이상 등), 자격요건자들이 100% 출자한 SPC

- 또한,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,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☞(참고)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보도자료>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

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개요

■ 주요내용

- 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
 -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(SPC)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%에서 70%로 완화
- ②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이중절차 개선
 -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해당법률에 따라 변경될 경우,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

■ 시행일

- 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: 2015년 7월
- ② 개발계획 변경 관련 이중절차 개선 : 2015 1월

■ 노인·아동·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(☎ 044-203-5124)

- '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·아동·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지금까지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, 시설보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,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지원을 강화합니다.
-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% 이하 취약계층(노인·아동·장애, 98만 가구)을 대상으로 지급되고, 동절기('15.12~'16.2)에 전기·가스·등유·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며,
 - 가구원수, 주거형태,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, 최대 16.5만원 ~ 최소 5.4만원(15단계)으로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

2015년도 에너지바우처 도입

- 추진배경 : 노인·아동·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
- 주요내용
 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40% 이하 취약계층(노인·아동·장애, 98만 가구)
 - 지원기간 : 2015년 12월 ~ 2016년 2월(동절기 3개월간)
 - 지원규모 : 가구원수, 주거형태,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,
최대 16.5만원~최소 5.4만원(15단계)으로 차등 지급
- 시행일 : 2015년 하반기(신청접수)



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
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(☎ 044-203-4431)

-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하였으나,
 - 2014년 8월부터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,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* ①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, ②무형재산권 임대업, ③시장 및 여론조사업, ④물품감정·계량 및 견본추출업, ⑤환경정화 및 복원업, ⑥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, ⑦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 - 제조업과의 융합·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
- ☞ (참고) 법제처 홈페이지(법령검색)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조 제2항제14호~제20호)

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

- 추진배경 : 제조업과의 융합·연계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여, 입주가능 지식산업을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
- 시행일 : 2014년 8월 6일



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

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(☎ 043-870-5516)

■ 2015년 1월 1일부터 불법 계량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.

- (계량기 수거) 계량기의 허용오차, 사용자의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업체는 **자발적으로** 수거하고, 이행하지 않는 경우 **정부가**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(과징금)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**최대 2억원의 과징금**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필요한 경우 **위반업소명을 공표**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■ 포장 상품의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(정량표시상품)해야 할 품목을 확대합니다.

- 정량표시 대상품목을 식료품 위주의 26종에서 물티슈,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**27종으로 확대**합니다.

☞ (참고) [법제처 홈페이지](#)(법령검색)계량에 관한 법률

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: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계량기 관리의 자율성은 확대하고, 불법·불량계량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계량제도 개선·보완

■ 주요내용

- ①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법정관리 계량기·정량표시상품 품목 조정
- ②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계량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
- ③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엄정한 사후관리 및 처벌기준 강화
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

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(☎ 043-870-5453)

- 앞으로, 모든 어린이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.
-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,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됩니다.
 - 이에 따라, 어린이제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체 또는 제3자의 시험을 통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.
- * 모든 어린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, 개별 안전기준이 제정되어있는 고위험 제품은 개별안전기준에도 적합해야 함
- 또한,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제품을 제조·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합니다.
-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, 수입·구매대행 행위도 금지되며,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☞ (참고)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>알림마당>설명회자료

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 제정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: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,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
- 주요내용
 - ① 안전관리대상 확대, 모든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기준 운영
 - ② 사고보고의무 부과, 판매중개 및 구매·수입대행 금지, 처벌기준 강화 등
- 시행일 : 2015년 6월 4일

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추가

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(☎ 042-481-8353)

- 창작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을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,
 - 이미 실시 중인 상품에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게 되므로 안정된 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또한, 우수디자인 선정상품임을 근거로 디자인의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디자인이 판매 또는 전시 등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일 경우 ‘신규성 상실 예외주장’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.

2015년도 디자인 우선심사의 확대 대상

- 추진배경 :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 지원
- 주요내용

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■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

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(☎ 042-481-7418)

-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기존 전자출원 수수료 6만2천원보다 저렴한 5만6천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
- 지금까지 출원인이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하게 된 경우 특허청에서는 상품명칭 인정여부 및 정확한 상품 류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체DB로 자동분류하였고 자동분류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에 분류의뢰를 하였습니다.
- 그러나 출원인이 정확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해서 출원하여 자동분류되는 경우 분류의뢰 필요성이 없어져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.
- 따라서 절감된 행정비용혜택을 출원인에게 되돌려주고자 기존 전자출원수수료보다 약 10% 저렴한 5만6천원 수수료체계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.
- 또한, 출원인의 상품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시상품명칭 의 개수도 기존 1만5천개에서 4만 5천개로 확대됩니다.

2015년도 저렴한 상표출원수수료 대상 항목

- 추진배경 :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전자출원한 경우 기존 전자출원 수수료 보다 저렴한 출원 수수료 적용

■ 주요내용

- ① 상표 전자출원수수료 인하(62천원 → 56천원)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(잠정,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)

※ 입법 진행중, 예산 심의중 등의 사유로 시행여부, 시행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표시와 함께 진행상황 기재 요망

■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

관세청 특수통관과 (☎ 042-481-7834)

-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됩니다.
 - (현재) 납부세액의 30% → (향후) 납부세액의 40%
 -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(미화 400달러 → 600달러)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 -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(2년내 2회 이상)에게 납부할 세액의 60%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관세청 홈페이지>뉴스/소식>새소식>보도자료>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

■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인상

- 추진배경 :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유도
- 주요내용
 - ①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30%에서 40%로 인상
 - ②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자(2년내 2회이상) : 납부할 세액의 60%
- 시행일 : ① 2015. 1. 1. ②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적용

